

수강생은 이번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온라인 강좌를 청취하고, 과제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동위 원소교육연구원에 제출한다. 또한 7~8월중 3일 간의 실험실습과정에 참석하여 실습교육을 받고, 12월에 총정리교육 및 수료시험을 마치면 수료증 을 받음과 동시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면허시험에 필요한 1년의 실무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RI통신교육은 그동안 이용자의 애로사항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RI취급 자일반면허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생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유관기관 동정

과 ● 학 ● 기 ● 술 ● 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과 학기술부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안)을 제정,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관련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해 매년 1월 말 이전에 당해연도의 방사선이용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과기부는 또한 방사선 관련 연구를 주관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주관연구기관과 정보관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

문대학,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과 원자력 또는 방사선 등 관련 전문법인 및 단체 중에서 인력 시설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시행령(안)은 또한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인가기준, 정관의 기재사항 및 공제 조합의 등기사항, 정관 등의 변경인가 신청서류 등과 함께 공제조합의 출자, 지분의 양도·취득, 보증대상, 보증 및 용자 한도, 보증·공제의 종류 및 보증수수료, 조합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28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규제개혁위,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 공포할 계획이다.

방사성동위원소 위치확인 검토

과 학기술부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실사건이 거의 1년반만에 한차례꼴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방사성동위원소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비교적 강력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방사선원 세슘(Cs)-137이 분실된 것과 관련, 6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위

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 납용기에 보관되는 방사선원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칩을 부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5일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Cs-137은 납용기에 보관돼 그 상태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봉됐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당 500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측은 경고했다.

암 등의 치료용을 제외하고 한사람이 1년동안 피폭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mSv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실된 방사선원이 노출될 경우 이를 개봉해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당 연간 허용치의 10배를 피폭하는 셈이다.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피폭량을 일컫는 반치사(피폭)량은 4천mSv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은영수) 관계자는 “국내에서 방사선원이 분실돼 이에 노출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히고 “만일 분실된 방사선원을 개봉해 소지할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5일 분실된 방사선원은 개봉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2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방사선원 분실사고는 모두 21차례로 이 가운데 10건(20개)이 미회수됐다.

또한 동 기술원 측은 5일 분실된 방사선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수되지 않은 방사선원은 모두 방사성 에너지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3~4일 후면 중세를 호소해 병원을 찾게되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분실된 방사선원의 에너지 약화 시간을 말하는 반감기(半減期) 역시 대부분 75일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사능테러 특별 경계강화

과학기술부는 20일 이라크전이 발발함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능물질 사용기관에 방사능 테러 특별 경계강화 조치를 발령했다.

과기부는 이날 ‘이라크사태 정부 종합대비계획’에 따라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사능 테러 상황관리반을 가동해 방사능 물질 사용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방사능 물질에 대

한 관리를 강화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해 과기부 원자력안전심의관을 반장으로 하는 방사능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구성된 방사선사고 대책반과 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비상진료반을 상시대기 체제로 유지도록 했다.

